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인권단체연석회의/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조계종노동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사진부, 경제부, 노동부, 서울시 담당

발 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담당 : 최재혁 간사 02-723-5036 labor@pspd.org)

제 목 [보도자료] 구의역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추모와 대책의 철저한 이행 촉구 기자회견 개최

날 짜 2016. 6. 8. (총 4 쪽)

보 도 자 료

"누가 이 청년을 이렇게 슬프고 비참하게 죽게 만들었나요?"

구의역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추모와 노동자·시민 안전

대책의 철저한 이행 촉구 범시민·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구의역 정비노동자,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희생 노동자 추모하고
정부와 서울시에게 철저한 원인규명과 조사결과의 투명한 공개 촉구,
반복되는 사고와 대책발표...이제는 발표된 대책의 철저하고 신속한
이행 필요, 안전인력 확충, 직접고용 등 서울시가 강력한 의지 보여야

일시 및 장소 : 6월 8일(수), 오전 11시 반, 서울시청 앞

1. 취지와 목적

-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생명을 잃은 노동자를 추모하고자 함. 현재 우리 사회는 억울한 죽음과 안타까운 추모가 일상이 돼버려, '비정상적' 이고 '반인간적' 인 사회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음.
- 이번 사고가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안전과 연관되어 있어 마땅히 공공행정에서 담당해야 할 주요한 업무의 '외주화(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죽음의 외주화라는 비판까지 터져나오고 있음)' 와 △그로 인한 관리·감독 부실과 인력부족에서 기인했고, 이러한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노동자를 위험한 업무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사회적으로 큰 공감을 얻고 있음.
- 서울특별시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노동자 사망과 관련하여 박원순 시장의 사과와 함께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진상조사와 투명한 공개, 현재 외주화된 업무의 직영화 등 발표된 대책에 대해 취지에 공감하고 방향에 찬성함. 그러나 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은 발표되는 대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발표된 대책의 신속하고 철저한 이행이 더욱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음.

-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단체연석회의,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조계종 노동위원회 등 범시민·인권·종교·노동단체는 구의역과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일어난 사고에서 생명을 잃은 노동자에 대한 깊은 추모와 함께, 정부와 서울시 등에 철저한 진상조사, 대책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됨.

2. 개요

- 제목 : 구의역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추모와 노동자·시민 안전 대책의 철저한 이행 촉구 범시민·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06.08.(수) 오전 11:30 서울시청 앞
-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단체연석회의,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조계종 노동위원회 등

■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서울특별시 대책(6/7(화)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 참가자의 입장

- 진상규명위원회, 시민의 안전·생명과 직결된 외주화에 대한 “직영” 전환, 전관채용 척결, 지하철 안전시스템 혁신 등 제안된 대책의 취지와 방향에 찬성함. 그러나 일부 내용에 있어 보다 명확한 입장과 결연한 의지의 표명이 요구됨.
- 지난해, 강남역 정비노동자 사망사건에서도 대책이 밝혀진 바 있으며 발표된 대책의 이행 여부와 그 정도를 확인할 수 없는 바, 대책의 신속하고 성실한 이행이 중요한 점을 재차 강조함.
- 외주화와 그로 인한 관리감독 부재와 인력부족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생명과 직결된 외주화에 대한 “직영”은 그 취지와 방향에 있어 찬성함.
- 그러나, 서울시 대책에서 안전 인력 확충, 정비 인력의 적절한 수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음. 이번 사고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과도한 업무량과 부족한 인력이 꼽히고 있음. 직영과 함께 ‘적정한 인원’의 보장이 가장 먼저 추진되고 달성되어야 함.
- 즉, 안전 및 정비와 관련한 인력확충과 직접고용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최대한 신속하게 발표되어야 할 것임.

- 인력 확충과 직접고용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 보다 적극적이고 결연한 의지가 필요한 이유가 또 있음. 안전과 정비와 관련해서 인력 확충과 직접고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중앙정부가 개별 기관의 인력 구조를 인건비로 통제하는 “총액인건비제도”가, 인력의 확충과 해당 인력의 정규직 직접고용 등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중앙정부의 반대와 현행 제도에 맞서, 인력 확충과 직접고용을 관철시킬 서울특별시의 향후 계획과 결연한 의지 표명이 요구됨. 당연히, 중앙 정부의 잘못된 정책 태도도 차제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임.
- 지하철 스크린도어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산하 기관에서 운영 중인 외주사업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있어야 함. 이는 서울시의 대책에도 포함되어 있음.
- 그 중 이익은 사유화하면서, 위험과 비용은 시민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민간위탁과 민자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이 요구됨.
 - 예컨대, 스크린도어의 도입 취지는, 이용자의 안전, 지하철 역사 내 공기질 등과 관련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서울시내에서 가장 이용자가 많은 역 24개의 경우, ‘광고회사’에게 시설의 운영권이 부여되어 있는 상황임.
 - 이러한 기부채납 형태의 민자산업은 서울시내 버스중앙차로의 정류소에서도 발견되는데 주요 지하철 역사의 스크린도어와 서울시내 버스중앙차로의 정류소 등 수많은 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주요 교통시설의 안전하고 깨끗한 관리를, 광고수익을 노리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면서 유지·관리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광고회사에 맡겨놓은 상황임.
 - 서울특별시는 이번 발표에서 직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도, “메트로 24개역 스크린도어를 민간투자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유진메트로컴”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협약변경 및 업무체계 개선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재구조화를 통한 직영 방안도 적극 협의” 한다는 수준의 대책을 발표했음.
 - 공공성이 충분히 담보되어야 하는 시설과 장소, 그리고 이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과 업무는 공공의 영역에서 정부기관 및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옳음. 신속한 재구조화를 포함하여 모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구의역 정비 청년노동자,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억울한 죽음을 다시 한 번 깊이 추모하고 애도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수립과 그 철저하고 신속한 이행을 정부와 지자체에 강력하게 촉구하고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끝.